

ISSUE & FOCUS

Newsletter 2017-3(2)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객을 제한하고 있고, 롯데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발언을 통해서도 중국은 한국에게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대에는 합리성이 없다. 중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그들의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써 중국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국 내 일부 인사들이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하듯이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있다거나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세부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이미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여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핵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사드가 아니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반대를 고려하여 3년 가까이 배치에

관한 결정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한국은 중국이 어떤 경제적 압박을 가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할 방법은 많지 않다. 그러나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어 중국 관리들을 초청하는 방식 등으로 현장 확인을 하게 되면 그들이 오해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발에 대하여 격양되기 보다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한중관계의 본질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

이 기회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인가를 근본적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 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고, 이로서 중국과 정치 및 안보적인 협력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는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는 가입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미국의 우방국 원수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한중관계는 한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11월의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중국은 철저히 북한 편을 들었고, 거부권을 위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결의안은 차단시켰다. 북한이 반복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였지만,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다.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김정남을 북한이 VX로 독살하였지만,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지 않은 채 혈맹의 관계를 확인까지 하였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수사(Rhetoric)에 불과한 내용이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50개 정도의 국가와 동반자관계를 체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이나 의무를 약속하거나 수행한 바가 없다. 유럽의 북대서양기구(NATO)에서도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사용하는데, 그들의 정의에 의하면 “동반자관계는 나토조약 제5조, 즉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지원한다는 핵심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관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안보적인 협력의 의무가 없는 관계이다.

현실적으로도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다.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상호우호협력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에 의하면 “북한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북한의 요청이 전제되어 있지도 않고, 쌍방이 합의해야 수정 또는 폐기되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북중 간의 동맹관계는 강하

다.

지금까지 한국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입장을 너무나 크게 존중해준 셈이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인식하자 중국이 교만해졌고, 따라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내정간섭을 하게 된 셈이다.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현실에 맞는 한중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사드를 둘러싼 국내 루머의 피해

사드 배치에 관하여 중국이 반대하는 데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과 그 논리의 영향이 컸다. 한국의 신문에서 보도되는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주장이 중국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과 정치가들에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ICBM을 요격하고, 따라서 중국의 핵억제태세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는 분석이 많았다. '사드'(THAAD)라는 소설에서는 “사드는 전쟁의 연계선입니다. 중국은 한국부터 공격합니다. 바로 그 사드를 없애려고 말입니다.”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 국민이나 정치지도자에게도 전달되었고, 그들은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드를 둘러싼 루머의 존재와 그 폐해를 인식하는 것도 유사한 실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장으로 제기된 쟁점은 다섯 가지였다. ①사드가 유사시 중국이 미국으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있다. ② 사드가 부착하고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 ③ 사드의 구매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④ 사드의 성능 자체가 미흡하여 효과가 없다. ⑤ 사드의 레이더에서 심각하게 유해한 전자파가 나와서 주민들의 건강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의 반대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루머이다.

①의 경우,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ICBM은 한반도 상공이 아니라 시베리아와 북극을 통하여 날아가고,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ICBM은 1,000km 이상의 고도로 날아가서 150km 고도까지만 요격할 수 있는 사드로는 도달할 수 없다. ②의 경우, 사드의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1,000km에 불과하고, 탐지용으로만 활용할 경우 탐지거리가 다소 길어지지만 한국에서는 산이 많아서 수평으로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성주에서 2,000km 거리에 빔이 도달할 경우 중국의 미사일은 수백km 공중으로 올라와야 탐지가 되어 실효성이 없다. ③의 경우, 이번 사드는 미군이 구입하여 텍사스에 배치해 둔 것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한

국이 비용을 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군이 어떤 장비를 배치하였다고 하여 방위비분담을 올린 적이 없다. ④의 경우, 사드와 유사한 무기인 이스라엘의 Arrow-3의 경우 요격률이 99%로 공개될 정도로 공기가 없는 150km의 상공에서 실시하는 사드의 요격은 명중률이 높다. ⑤의 경우, 2016년 7월 한국의 기자들이 미국 괌(Guam)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포대를 방문하여 전자파를 직접 측정한 결과 허용치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국 사드에 관한 일부 인사들의 무책임한 루머가 국민들을 현혹시켜 내부적으로도 국민여론과 정치인들을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중국 정치인에게도 영향을 줘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든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근거 없는 루머가 안보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국민 각자가 유의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항보다 중요할 것이다.

향후 대응과제

우리의 대응방안은 너무나 명확하다.

첫째, 중국이 어떤 경제적 압박을 가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합리성이 없는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한국이 굴복한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또 다른 사안으로 한국을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을 시험하는 사안이 되고 말았다.

둘째, 국민들의 철저한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 반대해 왔던 야당과 일부 인사들도 사드에 관한 오해에서 벗어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사드의 조기 배치 및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조치 강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중국이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단결된 모습을 보일 경우 중국의 입장은 달라질 것이다.

셋째, 중국의 경제적 압박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체적인 다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한다. 여행자들의 경우에도 동남아국가로 다변화하고,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시키면서 다른 더욱 적합한 지역을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무역구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포괄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한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사드를 한국이 구매하여 배치함으로써 방어의 신뢰성을 높이고, 단거리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을 구입하여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방호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L-SAM과 M-SAM 요격 미사일의 개발 속도도 가속화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중국은 한국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여 한국에 대한 압력을 멈출 수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편을 드는 것은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본질을 중국에게 알리고, 서로가 과장된 기대를 갖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가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경우 서로가 실망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위기 시에는 곤란하지만 평시에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한국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변화와 시정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한국이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대응할 경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중국의 압력도 진정되고, 오히려 경제, 사회, 문화 측면의 교류는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